

# 이재명, 제주 찾아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영구 배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2일 제주도를 방문해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폐지’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제한해 주시면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는 순간 즉각적으로 거부 안 하고 사인(서명)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제주 제주시 동문 로터리 유세에서 “우리는 한 번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않는다. 될 때까지 반드시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권력을 동원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민사상 소멸시효와 형사상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거부된 뒤 국회 재표결 끝에 최종 부결된 바 있다.

이 후보는 “만약 4·3 학살에 대해서 우리가 빠른 시간에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엄정하게 물었다라면 광주 5·18 학살이 있었을까, 저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국가폭력범죄 단죄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광주 5·18에서 희생된 그 수백명 영령들이 작년 12월 3일 국민들을 살려낸 것”이라며 “이번 6월 3일 대통령 선거는 작년 12월 3일 시작된 세 번째 제주 4·3을 청산하는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폭력범죄, 국민이 말한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오전제주시 일도일동 동문로터리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연설을마친 뒤 엄지를 치켜세우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매년 4·3 제주 방문… 내년에는 대통령 돼 방문했으면”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폐지법, 국회 통과되는 순간 공포할 것”

권력으로 국민의 생명, 자유, 인권을 침해하는 그런 범죄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공소시효를 배제해서 그 행위자는 살아있

는 한 반드시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며 “그에 더해 민사상 손해배상 시효도 제한해서 그 국가폭력 범죄자가 재산을 물려

준 범위 내에서는 그 후손들조차도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아울러 “제가 거의 매년 4·3 기념일에 제주를 방문했는데, 내년에는 대통령이 돼서 방문했으면 좋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뉴시스

# 김문수 “국회의원 10% 줄일 것… 불체포·면책 특권도 폐지”

개헌·정치개혁 공약…대통령 임기 3년 단축4년 중임제 도입  
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 ‘제왕적 대통령’ 인사권도 합리화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2일 개헌을 통해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4년 중임제를 도입해 2028년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동시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과 국회의원 불체포·면책 특권 폐지 등도 추진한다고 했다.

김 후보는 이날 ‘정치 판결이로 대한민국을 재판을 받는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개헌·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정치권의 무제한적 특권으로 정치와 국민의 괴리가 커지고, 정치의 사법화·사법의 정치화를 부추기는 현 체제를 타개하기 위해선 전격적인 개헌과 정치개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김 후보는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과 권력 분산을 통한 정치 복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 임기의 3년 단축을 추진하고, 4년 중임제 도입을 위해 2028년 4월 대통령과 국회의원 동시 선출을 진행한다.

대통령 인사권 합리화를 위해서는 주요 인사 자리를 여야 논의로 선정해 ‘K-플럼북(대통령실장이 임명하는 공직 명부)’을 작성한다. 플럼북에 포함된 직책 외에는 대통령실 영향력을 차단하고 관련법과 인사 원칙을 철저히 준수한다는 방침이다. ‘낙하산 금지법’도 제정해 플럼북에 포함되지 않은 낙하산 인사가 드러날 경우 인사 과정에 연루된 이들의 처벌조항과 당사자 파면근거를 마련한다.

김 후보는 직무와 행위에 대한 대통령 불소추특권도 폐지하겠다고 했다. 직무와 관련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일반 국민과 동등하게 취급한다는 것이다. 야당 추천 특별감찰관도 임명한다.

국회 개혁도 공약했다.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10% 감축하고, 국회의원 불체포·면책특권도 폐지한다. 또 국회의원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한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김문수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2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5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최진식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의 정책제언을 들으며 미소짓고 있다. /뉴시스

권한 남용을 견제하겠다고 전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정치인을 퇴장시켜 주권자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목표다. 또 탄핵이 인용되기 전까지는 공직자가 직무를 계속하도록 해 탄핵 남용의 부작용을 축소한다는 공약도 밝혔다.

사법 개혁을 위해서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중립성·독립성 확보를 위해 추천위원회를 법정기구화하고, 국회의 3분의2 동의를 받도록 한다. 이를 통해 특정 정치세력이 사법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뉴시스

## 호남은 이재명 90% 몰표에 응답할까? 12·3계엄 5·18정신으로 막아 대선길 호남의 전략적 선택 대선결과 갈려 지역인재 중용·호남 정치 부활 촉각

6·3 대선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1강1중1약’ 구도의 대선판에 호남의 전략적 선택이 어떻게 작동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주당의 바람대로 90% 이상 투표에 90% 이상 득표율로 이재명 후보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낼 것인지, 아니면 대안 후보나 투표 포기로 또다른 의사표시를 할지 주목된다.

이번 조기대선은 어느 대선과 달리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이 됐고 계엄 내란시대를 막은 핵심은 1980년 5월 계엄군에 맞선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이 깔려 있다는 점에서 호남의 선택에 각별함이 있다.

이 후보도 최근 전남 유세현장에서 “호남은 민주당의 텃밭이 아니라 죽비다. 민주당은 호남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며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 21대 대선에서 이 후보의 호남지역 득표율을 90% 이상, 투표율도 90% 이상으로 잡고 있다. 가능하면 투표율을 역대 최대치인 92.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호남이 결집해야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고 집권 이후에도 안정적인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지난 20대 대선에서 이 후보의 광주·전남 득표율이 각각 84.8%, 86.1%에 그쳤다는 아쉬움이 반영돼 있다. 당시 호남에서 90% 이상 압도적인 표만 나왔다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의 0.73% 포인트의 격차를 뒤집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이 후보가 기록한 광주·전남 득표율은 19대 대선을 제외하고 민주당 후보가 받은 가장 낮은 수치였다. 19대 대선은 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득표를 양분했던 선거였다.

하지만 이번 대선의 양상은 다르다.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지금 여론조사 추이대로라면 광주·전남에서 90% 안팎의 득표는 무난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12·3 계엄사태 이전까지만 해도 호남에 반민주당 정서, 반이재명 정서가 일부 있었던 게 사실이지만 계엄사태와 탄핵정국을 거치면서 지지층의 결집현상이 두드러졌다는 게 그 반증이다.

이 후보의 당선가능성이 높은 상황

에서 호남이 압도적인 지지를 보여줘야 향후 호남의 정치적 입지나 지역발전에 유리할 것이라는 전략적 판단도 담겨 있다.

물론 민주당 일당독점 구도의 폐해가 가혹이나 심한 호남에서 아무런 대안 없이 90% 이상 몰표를 주는 게 과연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겠느냐는 회의론도 있긴 하다. 그렇지만 이번 대선 만큼은 압도적인 지지로 계엄 내란세력을 심판해야 한다는 정권심판론에 무게추가 쏠리고 있다.

국민의힘도 지난 20대 대선 때는 호남에서 ‘마의 10% 벽’을 넘어섰고 광주 불선동 일부에서 20%대 득표율까지 기록했지만 이번 대선판에 계엄사태의 후폭풍을 막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호남의 선택을 가를 또하나의 관건은 투표율이다.

이재명 당선이 유력한 상황으로 갈수록 ‘굳이 나가지’라는 심리에서 기권표가 많아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도.

광주가 역대 대선에서 줄곧 투표를 1위를 기록했으나 유독 17대 대선(64.3%)때만 저조했다. 당시 ‘이명박대세론’이 강해 투표 자체를 포기한 유권자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이번 대선 목표는 득표율을 해당 지역 의원이나 단체장의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방침까지 내건 것도 궁색하지만 같은 맥락이다.

조기대선의 성격 상 대선이 끝난 직후 곧바로 정부 조각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지역인재 중용에 대한 관심도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미 인력 풀을 총가동해 조각작업에 들어갔다는 설까지 나온다. 호남에서는 호남총리론이나 장관급 입각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이 후보는 최근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총리든 장관이든 능력 위주로 가겠다. 탕평 안하면 죽는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역대 대선에서 그랬듯이 호남의 전략적 선택은 이 모든 것과 맞물려 있다.

/이광수 기자

철근 가공 및 도소매

이형봉강 · 철근공장 가공 커플러 shop-DWG

광주광역시 광산구 빛그린동로 134  
T 062-716-3488 F 062-716-5888  
E sambu6488@naver.com W sambu6488 / 1234

삼부철강(주)